

내달 중순 설연휴 직후 개각설 부상…尹, 최적 시점 고민할 듯

1월 중순 설연휴 직후 개각설 부상…尹, 최적 시점 고민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높일 최적의 쇄신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내달 설 연휴(1월 20~24일)와 맞물려 있는 1월 중순이 그 타이밍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년 개각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이자, 발화성이 큰 개각 이슈를 살불리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윤석열 2기 내각 진용을 짜는 논의에 서서히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임기 첫해 확립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서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23년은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이라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개각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 말까지 한 달여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일정까지 고려한 분석이다. 업무보고에는 18개 부과 4개 처, 4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대체),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외교 일정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업무보고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개각은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 김영민 기자



신축 빌라 노린 전세사기

‘빌라왕’ 16건 포함 106건 수사의뢰

했다.

브로커는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를 던졌고, 세입자들은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은 재산이 없고 경제 활동도 거의 없는 ‘비자사장’ B씨에게 넘겼다. 주택 1천139채를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임차인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이 이런 비자사장 역할을 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B씨가 내줄 수 있는 보증금은 없었다.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23.8%, 30대가 19.0%였다.

/ 김채원 기자

주민등록 넘어 ‘생활인구’ 개념 도입…외국인·지역체류자 포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집의 모습

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제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계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 김민경 기자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 포함 제안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

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어렵게도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이민정 기자



자치분권 시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열어갑니다



나눔의집·정대협 후원금 반환되나…오늘 1심 선고



정대협·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50여 명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날 연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

는 내용이다.

2차 소송에는 32명이 참여해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에 총 172만원을, 나눔의집에 약 3천6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 단체의 후원금 관련 논란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약 5천만원을 청구하

는 소송을 냈다.

이후 정의연과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 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다.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에서도 재단이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단체는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애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쟁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 신현우 기자

인신매매방지법 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5

/ 홍영민 기자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결혼 안해도 같이 자녀 낳으면 친족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면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

를 받는데, 먼 친족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자체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 26명인데 새로 운 규정을 적용하면 5천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 성희준 기자

검찰,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30억원 횡령 및 4천500억원 배임 혐의도



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

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인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A씨는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

무재표 작성, B씨는 4천500억원 배임 등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 최용문 기자

당신의 희망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LH가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내 희망과 삶을 잇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與, 오늘 상임전국위…'당원투표 100%' 전대 를 개정 착수



전당대회 를 개정 관련 기자회견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20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뽑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당헌에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이다.

결선 투표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대 를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대 를 변경되면 다음 달 초부터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 전인 내년 3월 초로 예상된다.

/ 이병석 기자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尹대통령 주재할 듯

'MB 사면' 기정사실…김경수 복권 없이 잔형면제 가능성 상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데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다음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

열고 대상을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의 특징은 '정치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되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

박(MB)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명

박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전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

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 김수홍 기자

한총리 "예산안 처리 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범위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서정미 기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당해



하게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 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고발은 국민의힘 측이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 와중에 이뤄졌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 양희진 기자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험급여지급



빠른 배우를 드는!

02

요양 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푸른 지구를 되찾을 시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

“기업은 범법자로 전락, 가장 취약한 근로자부터 일자리 잃게 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준비하는 추경호 총리

그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뿐만 아니라 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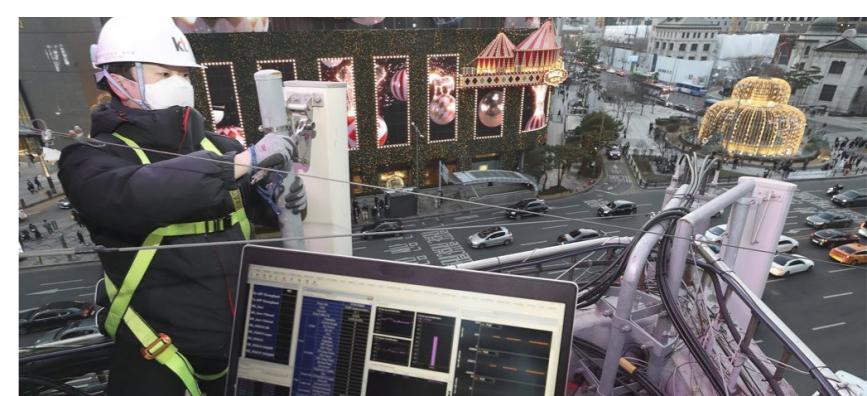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

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 김근우 기자



KT, 연말연시 대비 통신 서비스 집중 관리

SKT·KT “연말연시 트래픽 폭증 대비해 무선 기지국 증설 완료”

주요 통신사들은 20일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네트워크 집중 관리를 통해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017670]은 주요 행사장, 해넘이·해돋이 명소와 주요 고속도로, 터미널 등 트래픽이 몰리는 지역에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마쳤다.

특히 연말에서 연시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MMS(멀티 메시지) 발송량이 평시 대비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티맵, 에이닷 등 관계자 서비스를 아우르는 특별 소통 상황실과 통신 서비스 24시간 모니터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 이명호 기자

SK이노, 내달 CES서 SF배터리 등 친환경 혁신기술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하이니켈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SK지오센트릭·SK엔무브·SK온·SKIET·SK어스온 등과 함께 CES 2023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SK온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축한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CES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5개 제품이 8개 혁신상을 받았다. SK온의 SF배터리(Super Fast Battery)와 SKIET의 플렉서블 커버 윈도(FCW)는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SK그룹 관계사가 최고혁신상을 받은 건 2019년 CES 참여 이래 처음이다.

SF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3%에 달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한번 충전에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또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현재 시판되는 전기차 배터리 중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췄다.

FCW는 폴더블-롤러블 전자기기 및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다.

SK지오센트릭의 차량용 경량화 소재 UD 테이프, SK온의 NCM9+ 배터리, SKIET 배터리 분리막 제품도 혁신상을 받았다. 협업체계를 구축한 글로벌 파트너 기술도 소개된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지난해 투자한 미국 솔리드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인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3% 높고 전기차 탑재 시 1회 충전으로 약 930km를 달릴 수 있다. / 차명진 기자

‘아바타2’ 글로벌 흥행 ‘미지근’ 우려에 디즈니 4.8% 급락

영화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의 초반 글로벌 흥행 성적이 예상보다 미지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이 영화를 제작한 ‘콘텐츠 제국’ 디즈니의 주가가 19일(현지시간) 4.8% 급락했다.

디즈니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장 대비 4.30달러 하락한 85.78달러로 마감해 2020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바타2’의 개봉 첫째 주 박스오피스가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뒤 디즈니 주가가 급락했다고 진단했다. / 박석훈 기자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팩」

회계 / 세무관리	인사 / 급여관리	기업용문서 관리	화상회의
내PC 원격접속	팩스	메일	웹오피스
근태관리	경비청구	전자결재	일정관리
할일관리	노트	웹스토리지	조직도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문서협업솔루션	T-edge

* 홈피스 올인원팩 폐기지 종류에 따라 세부 서비스 구성은 달라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추진”

수도권 보증사고 중 34%가 인천…“피해 주거 맞춤형 지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에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열어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다.

원 장관은 이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 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일시 : 2022. 12. 18.(일) 14시 장소 : 미추홀구 중회의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현재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다. 이 중 113호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 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최문호 기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첫해…월 6181원 절감



그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월평균 교통비 4만656원의 15.2%인 6천181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매월 5회를 무료로 이용한 션이다.

참여자들이 받은 교통 마일리지는 1인당 평균 7만4천169원이었고 마일리지 지급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받은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41.0%를 차지했다.

이어 ‘3만원 미만’ 21.7%,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5.8%,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10.7%,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9.3% 순이었다.

시는 내년에도 15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3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경기도 내년 예산 33조 확정…기회소득 등 김동연 역점사업 탄력

‘선감학원’ 피해자 위로금 통과…임태희 공약 IB 사업비 등도 반영

경기도의회는 17일 정례회 마지막(7차) 본회의를 열어 33조8천104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33조7천790억원보다 31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본예산(33조6천36억원)보다는 2천68억원(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과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비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증명서 발급자)의 경우 연간 120 만원을, 장애인(2천명)은 건강증진·사

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978억원), 청년캡이어 프로그램(41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19억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통과됐다.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김 지사가 공약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13억원), 경기국제공항 건립 공론화 사업비(3억 7천만원)도 전액 반영됐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 만원) 7억4천만원도 통과돼 내년부터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시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원심의 사실오인·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측근이었던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1심 징역 7년 4월)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박씨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 강성민 기자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남양주시, 전철 시간 맞춰 마을버스 첫·막차 조정

경기 남양주시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19일부터 마을버스 ‘33-1번’의 첫차 시간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버스 첫차 시간을 5분 앞당겨 오전 5시 25분 전에 당고개역에 도착, 오전 5시 30분 출발하는 첫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했다. 33-1번은 별내면 청학리와 당고개역을 최단 거리로 잇는 노선으로, 버스 6대가 10~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첫·막차 운행 시간과 맞지 않아 시민들이 당고개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당고개역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열차 시간에 맞춰 이 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늦추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다음 달 이 노선의 훈장을 줄이고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응옥 기자

SAMJIN 삼진제약

맞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김영환·이범석 불협화음?…현금성 복지사업 등 놓고 간극

청주시, '김영환표' 출산육아수당 등 미편성…제설문제도 공방



김영환(왼쪽) 지사와 이범석 시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뛰어 충북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었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관계가 꺼끄러워진 모습이다.

청주시가 김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게 발단이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출산육아수당과 어르신감사효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사업은 도가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5년간 총 1천100만원을 분

할 지금하기로 하고 시·군에 소요 예산의 6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도가 통보한 첫해 사업 예산(시비 91억8천만원)을 세우지 않았다.

시는 이 사업 최초 5년간 1천71억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야 한다며 이 수당 신설에 대해 도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효도비도 부동의하고 내년 시비(70%) 20억7천만원을 편성치 않았다.

효도비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인데 시는 이미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충북이라는 점을 알렸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분담 비율 등을 놓고 반기를 든 셈

이어서 이를 현금성 복지사업이 보건복지

부 승인을 받아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

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렸던 지난 6일 아침 시의 제설작업 지원으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 이튿날 도가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안전감찰착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언론 질문에 "안전감찰은 행안부나 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결과 더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무덤덤하듯 말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청주지역 대설주의 보발효 당시 오장읍 등 충북도 관할 지방도에서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시청 내부에서 "안전감찰 얘기가 무색해졌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 배민정 기자



지난 3월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주진단 발족식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밀그림 나왔다

자본금 5천억원 규모

~8%에 불과해 지역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금융거래 비용 절감 등 지역민 편익이 늘고, 금융산업 생산·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모델로는 예금·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지역 상생형 금융이 제시됐다.

충남도는 16일 내포신도시 충남일자리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지역 내총생산(GDP)은 전국의 10%를 넘지만, 금융기관 점포 수와 수신 규모 등은 6

/ 김성훈 기자

광주지역 일제 강제 동원 시민역사관 건립 '난항'

姜광주시장, 시민모임 측 만나 "고민해보겠다"…후속 대책 '전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기업을 상대로 투쟁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역사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을 만나 역사관 건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일본 내 양심단체인 나고야소송지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큰 문제는 정부 간에 해결하더라도 기념관 건립 등 문제는 저희가 좀 챙겨보겠다.



오늘을 기회로 고민을 더 진척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무산에 대한 위로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자리는 위로의 자리였고 역사관 관련해서는 단체에서 건의한 한 사안"이라며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

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들을 보존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 역사 교육을 하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역사관 건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시민 모금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역사관을 만들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산 형성 성격의 '용지 마련 명목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하다고 해 모금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시민 모금 등 민간의 노력으로는 역사관 건립이 불가능해져 광주시가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역사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관에 전시할 예정이었던 피해자들의 진술서·편지·증거자료 등 1천149건의

자료들은 현재 습도 조절·화재 안전 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민모임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어 자료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조동호 기자

춘천시, 강원 첫 치매 전문 병동 건립…2025년 준공

춘천시가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치매 전문 병동을 건립한다.

18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 병동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공립요양병원인 춘천시노인 전문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치매 전문 병동은 치매 환자 전용 병동

으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요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춘천시는 국·도비 19억 등 총 5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치매 전문 병동을 준공할 예정이다. 건립 위치는 현재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 중인 부지 일부에 들어선다. 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851㎡ 규모다.

/ 이승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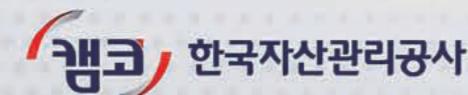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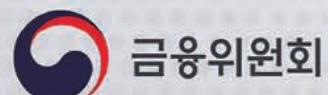
대한민국 으랏차차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돋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선거공보물 검열한 변협…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변협 선관위, 회장 후보자에 ‘집행부 비판’ 내용 삭제 요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군법무관 7회·60·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협은 23일 2차 선거 공보물을 발송할 때 안 후보 측 1차 공보물에서 삭제한 내용을 그대로 발송해야 한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



협회장 공보물 인쇄 내용 두고 변협 선관위와 후보 갈등

다고 적었다. 변협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달 7일 1차 수정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

답긴 면을 전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인쇄물을 선거권자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을 발송 시기에 맞춰 일단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면의 내용

은 삭제하고 검은 면으로 대체했다. 다

만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터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 측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의 삭제 요구가 “채권자(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공보물 내용은) 변협 회원들에게 공통된 관심사이거나 공적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후보자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러한 비판을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민중 기자

전남경찰 체감안전도 전국 1위…광주경찰 16위

치안 만족도는 광주 12위·전남 10위

전남경찰청은 20일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주관한 올해 조사에서 전남 청은 종합점수 82.2점을 얻었다. 체감안전도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기록했다. 전국 1위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달성했다. 직전 2년 동안은 연속 2위에 올랐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지역민이 느끼는 안전도를 5개 분야별 10점 척도로 점수화 해 산출한다. 전남청은 올해 중점 추진한 마을방범 CCTV 확충,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정온화, 범죄피해 고위험 독거노인 안전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이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호 전남경찰청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전남경찰이 되도록 체감안전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의 올해 체감안전도는 전국 16위에 그쳤다. 지난해 14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한편 치안 서비스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절차와 담당자 응대 태도 등 만족도를 평가하는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올해 광주청은 12위, 전남청은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조사에서 광주청은 9위, 전남청은 6위였다.

/ 박영민 기자

허위 자백받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



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그와 마약사범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지검은 올해 하반기(7~12월) 사법 질서 방해 사건을 집중 단속해 A씨 포함 54명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B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

광고 문의 : 1533-1545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

/ 이연희 기자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 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서울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역시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이다.

/ 홍민우 기자

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 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역시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이다.

/ 홍민우 기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상생협력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생협력 파트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01 상생협력

상생협력기금 운용
성과공유, 협력이익공유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05 농어촌 상생

농어촌 상생기금 운용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02 상생거래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기업 간 거래공정화
상생결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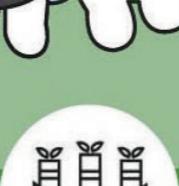
04 기술보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기술탈취 예방 및 사후구제



03 혁신성장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 개발·경쟁력 강화
해외 동반진출 지원



광화문광장 빛으로 수놓다…‘서울라이트 광화’ 내일 개막



서울라이트 광화는 19일부터 31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전역과 인근 건물 3곳에서 펼쳐진다.

‘2022 서울 빛초롱’과 ‘광화문광장 마켓’ 동시 운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를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채우는 ‘서울라이트 광화’가 19일 오후 6시 개막한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맞춰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서울라이트 광화는 19~31일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전역과 인근 건물 3곳에서 펼쳐진다.

서울라이트 광화의 메인 행사인 ‘시그니처 쇼’는 매시 정각 10분간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6m 길이의 조명 기둥 22개에서 빛줄기가 밤하늘을 향해 뻗어 나오고, 주변 3개 건물(세종문화회



관·(주)KT빌딩·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입면

과 광화문광장의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연계하는 빛의 쇼가 펼쳐진다.

시그니처 쇼가 끝나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과 역사박물관 ‘광화벽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등 개별 건물에서

미디어아트 쇼를 볼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체험형 미디어아트 ‘둠칫둠칫 서울’과 ‘시간의 틈’도 운영된다.

시는 서울라이트 광화를 방문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했다.

현장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상시 순찰한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요일(24·31일)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이외에도 서울라이트 광화를 감상하고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시민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인스타그램(@seoullight_official)을 통한 행사를 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매력적인 장소”며 “야간에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라이트 광화 기간 ‘2022 서울 빛초롱’이 동시에 열린다. 올해로 14회째인 ‘서울 빛초롱’은 그간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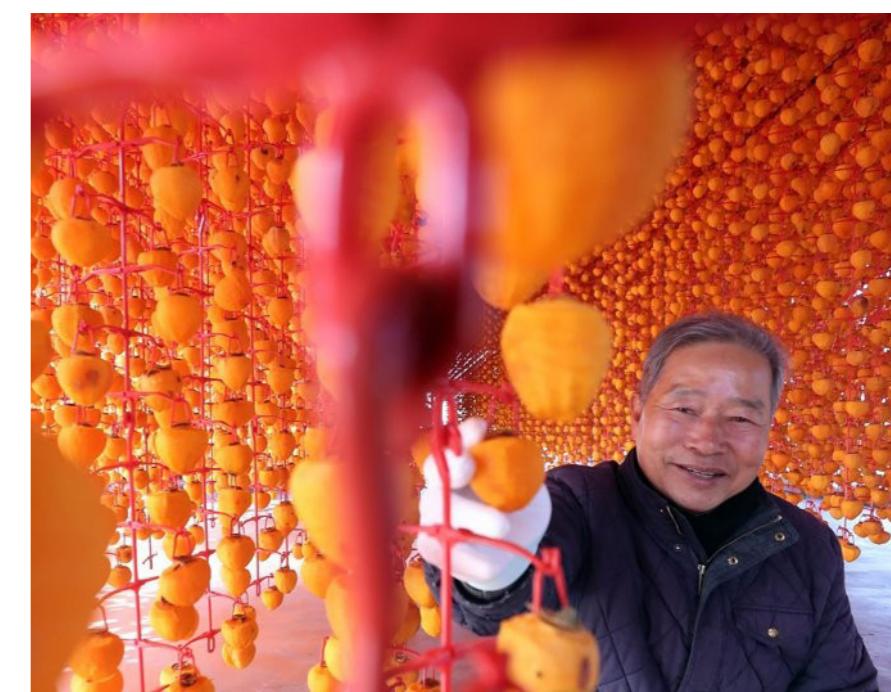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부터 세종대왕 동상 구역, 세종로 공원,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광장 전역에 걸쳐 빛 조형물이 설치된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매일 오후 6~10시 운영한다.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이 열린다.

총 50여 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공간 사이에 마련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과 겨울 먹거리를 판매한다.

/ 연규용 기자



절기 대설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곶감 덕장에서 농민 백한흠 씨가 건조 중인 곶감을 확인하고 있다. 지리산 맑은 공기와 살아있는 토양이 만든 산청 곶감은 쫀득하고 맛이 달다.

‘달콤 졸깃’ 산청곶감축제 29일 개막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 산엔청쇼핑몰서 할인전 진행

경남 산청군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천면 천령리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6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축제장에 가면 지리산 자락의 맑고 차가운 날씨와 낮은 습도로 그 어느 때 보다 품질이 우수한 곶감을 만나 볼 수 있다.

축제는 29일 단성면 남사에 담촌에 위치한 국내 최고령인 638년을 자랑하는 산청곶감의 원종인 고종시나무에서 축제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시작된다.

곶감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곶감 포토존 설치 등 새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곶감 디저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곶

감 호두·치즈말이 만들기’를 비롯해 ‘곶감 달고나·양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관광객을 찾는다.

참여행사로 산청곶감 열전, 산청곶감 진기명기 ‘김!잡았는김’, 번개장터 ‘곶감 경매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축제기간 산청곶감 품평회와 대한민국 대표 과일 7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고종시로 만든 곶감 전시회, 지리산 사전전 등 전시행사도 진행된다.

산엔청쇼핑몰에서는 ‘2023 설 기획전’과 함께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달콤 졸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곶감은 우리 민족 전통의 주전부리이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손꼽힌다.

/ 김채원 기자

연말 달구는 트로트 대전…‘미스터트롯2’ VS ‘불타는 트롯맨’



TV조선, MC 김성주와 네 번째 트로트 오디션…‘제2의 임영웅’ 탄생 기대 ‘TV조선 퇴사’ 서혜진 PD, MBN과 신작 론칭…‘트로트 세대교체’ 자신

1·2'와 ‘미스터트롯1’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인 만큼 시청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즌1은 시청률 35%를 돌파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이미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돼 완성도가 높은 편이고, 무대 준비부터 심사, 참가자 관리, 점수 합계 등에 능숙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김성주가 MC를 맡았다는 점도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김성주는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앞선 시리즈를 이끌어 왔고, 점수집계 오류 등 돌발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가며 우승자를 발표하는 등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였다.

심사위원에는 예리한 분석력으로 객관적인 심사평을 내놓는 장윤정과 ‘트로트 대부’ 진성, 붐 등이 시즌 1에 이어 이름을 올렸고, 노래 ‘아모레파티’로 젊은 세대에서도 유명한 김연자가 새롭게 합류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의 부제에 어울리게 참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앞서 다른 방송사 트로트 오디션에서 이미 우승, 준우승 등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과 준우승자 재하,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SBS ‘트롯신’이 됐다’ 준우승자 나상도,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1위에 오른 박서진 등이 새로 신설된 ‘우승부’에서 경쟁한다. 이들 외에도 슈퍼주니어 멤버 선민, 개그맨 손현수, 래퍼 슬리피, 김선근 전 아나운서 등 의외의 인물들도 출전한다.

‘불타는 트롯맨’, 오픈 상금제 눈길…홍진영 등 영입

‘불타는 트롯맨’은 상금 액수에 한도가 없는 ‘오픈 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신선향으로 승부수를 띠운다.

오픈 상금제는 참가자들이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상금의 액수가 한도 없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예고편에는 무대 위에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투명한 ‘머니볼’이 매달려 있어 호기심을 끌어올렸다.

회차마다 올라가는 상금이 ‘미스터트롯2’가 내건 상금 5억원을 초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다. 최고 상금이 7억원이 될 수 있다는 내부 관측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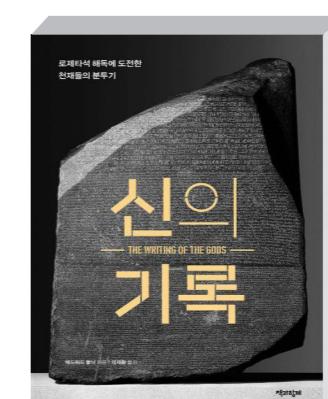
심사위원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우선 ‘미스터트롯 1’을 함께했던 김준수와 박현빈이 ‘불타는 트롯맨’으로 옮겨오면서 양 프로그램의 대결 구도에 불을 지핀다. 논문표절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홍진영도 ‘불타는 트롯맨’으로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여기에 남진과 설운도, 주현미 등 트로트 인기 가수들도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운다.

MC는 ‘미스터트롯2’의 심사위원인 장윤정의 남편 도경완이 맡는다. 제작진은 장윤정을 의식해 도경완을 섭외한 것이라고 선전 포고하기도 했다.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경쟁 프로그램에서 활약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볼거리다. 프로그램의 핵심인 참가자들은 예선부터 국민투표를 도입해 100명을 추렸다. 공개된 참가자 100명을 보면 20대가 대거 포진해 있고, 10대도 눈에 띌 정도로 연령대가 확 낮아졌다.

/ 신승희 기자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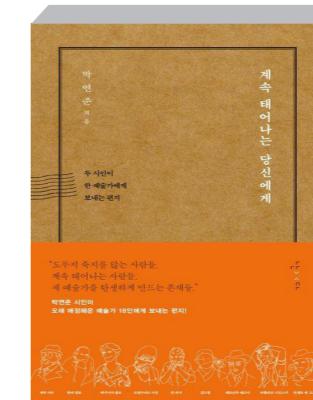


신의 기록

이집트는 유럽인에게 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스피크스, 야자나무, 신기루, 메뚜기, 끝없는 모래사막. 그리고 그 경외감은 성체자(聖體字·hieroglyphs)로 이어졌다. 성체자는 고대 이집트의 쓰기 체계다. 신전의 벽에는 긴 글이 있었다. 그 신전의 모든 기둥과 천장에도, 오벨리스크에도 성체자가 있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토스도 그 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비밀이 풀리기까지는 2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스턴글로브의 과학 수석 기자인 저자가 19세기 성체자로 쓰인 로제타석의 해독에 도전한 천재 장 프랑수아 샹풀리옹과 토마스 영의 경쟁과 분투를 그렸다. 저자는 이들이 혁파리를 짚는 순간부터 실마리를 찾고 마침내 성체자의 비밀을 파헤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전한다.

에드워드 놀니 지음 / 이재황 옮김 / 책과함께 / 432쪽



계속 태어나는 당신에게

박연준, 장석주 시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함께 쓴 세 번째 산문집이다. 두 시인은 에릭 사티, 프랑수아즈 사강, 김소월, 베지니아 울프, 나혜석, 장국영, 다자이 오사무 등 이미 세상을 떠난 18명의 예술가에게 각기 편지를 써 올렸다. 예술의 불멸성으로 시간이 흘러도 계속 태어나는 이들에 대한 헌사다.

박연준은 소설가 베지니아 울프에게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당신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말한다. 장석주는 시인 겸 화가 나혜석을 향해 “당신은 이 낡은 세계에 너무 일찍 도착한 선각자였다”고 전한다.

책은 앞과 뒤 표지의 구분이 없다. 서로 다른 두 권을 이은 것처럼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형태다.

박연준·장석주 지음 / 난다 / 324쪽

‘미스터트롯2’, MC 김성주 안정적 진행…‘우승부’ 신설

‘미스터트롯2’는 상금 5억원을 걸고 시즌1이 배출한 임영웅과 같은 스타를 찾는다. TV조선이 ‘미스터트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가만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쉽고 편한 금융을 선물하고,
포텐 빵빵한 스타트업 쑥쑥 키우고,
지구 공기를 100년 전으로 돌려볼라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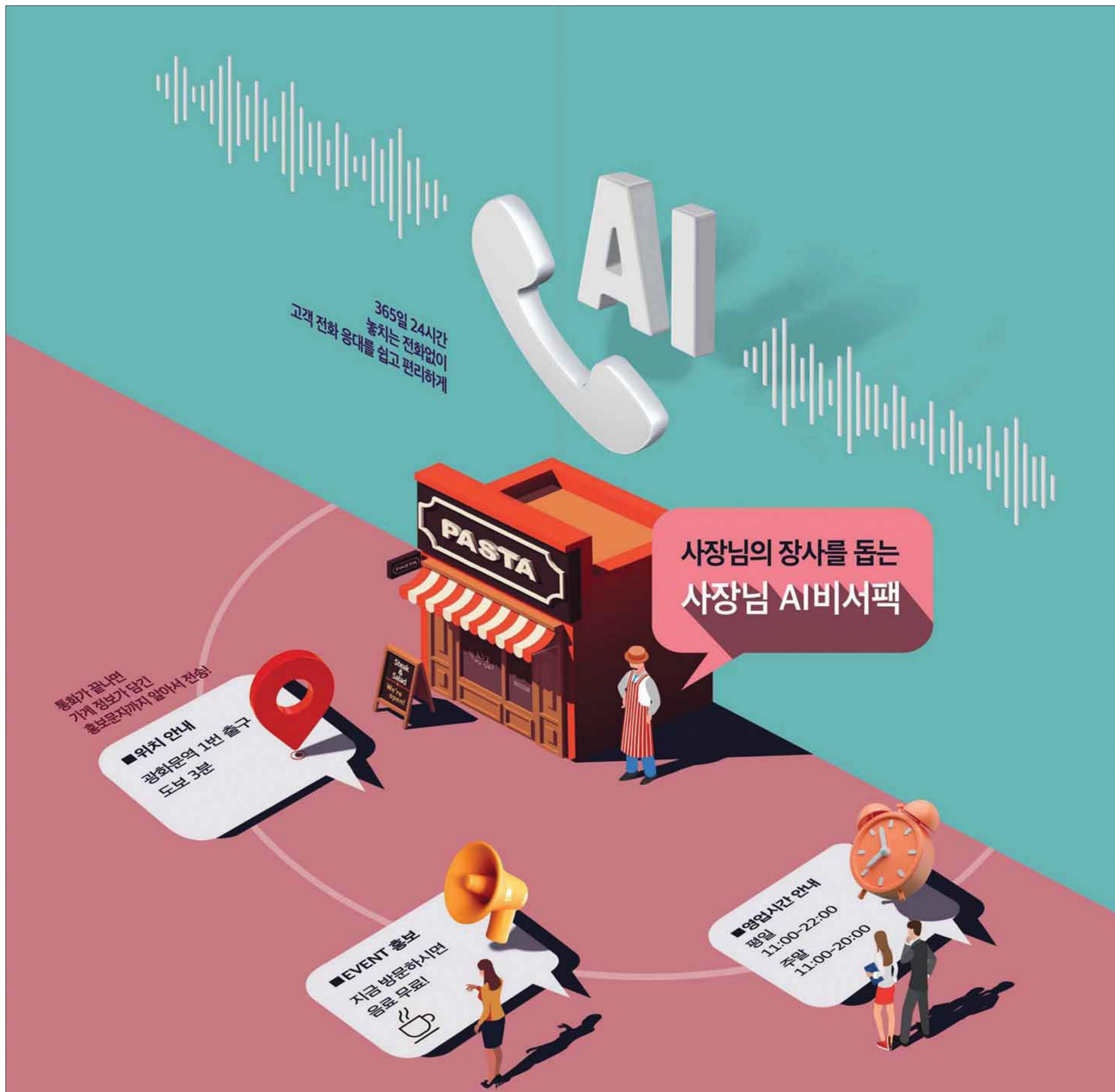
고객과 미래를 위해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티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예약·문의 전화도
어려웠던 홍보도
모두 다 편한 일로

[사장님 AI 비서팩]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고객 전화 한 통, 한 통이 소중한 사장님을 대신해
AI가 전화응대를 도와주고 가게정보 안내와 홍보까지 해주니까

사장님의 장사가 더욱 편해지도록
KT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KT 사장님 AI 비서팩'을 만나보세요!

이용문의 100번 | kt.com

DIGICO KT